

실업(失業) 문제

성 정 경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자문위원/전 LA 총영사

1. 현 실업문제의 성격

최근 한국에서 실업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보도를 자주 듣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고용없는 경제회복”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실업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구라파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면 실업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은 경기가 실업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현 실업문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점차 기계화·자동화가 이루어져, 인력 수요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무한 경쟁체제가 초래되고, 이 상황에서 모든 기업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인력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동향을 보면 “클린턴”대통령 시절의 호경기 중에도 계속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시키고 있었다.
-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고비용의 선진국에서 저비용의 후진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소위 Off-shoring이나 Out-sourcing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전자는 제조업이 후진국으로, 후자는 사무직업이 후진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전자는 엔지니어나 블루 칼라 근로자들의 직장이, 후자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의 직장이 후진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 최근들어 산업의 이동 뿐 아니라 후진국의 우수 인력이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선진국의 열등 인력을 밀어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의 IT계 명문 대학과 MBA 명문 대학의 졸업 철이 되면, 미국과 구라파에서 IBM과 같은 우수 기업이 사원 모집을 위해 인도기업과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 기업들이 경비 절약을 위해 과거 대학 졸업생을 신입사원으로 뽑아 훈련시키던 관행을 버리고 경력사원을 채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청년 실업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대형 할인 매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소규모 사업이 도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추가적으로 실업을 악화시킨다.
- 농업분야에서의 인력 방출은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된 현상으로 보인다.
- 선진국 국민들은 소위 3D 산업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들 직종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해오는 인력으로 채워지고 있다.

실업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 본인이 우선 생각나는 이유들을 나열하였다. 물론 본인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기계화가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한다든지, Off-shoring이나 Out-sourcing이 선진국의 실업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고, 또한 이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이들이 선진국의 직장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실업문제의 국별 비교

구라과 지역에서 실업문제, 특히 대졸자 실업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영·미 지역의 실업율과 불·독의 실업율을 비교할 때, 영·미는 비교적 완전고용에 가까운 반면 불·독은 상당히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독일은 11%에 이르는 실업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유증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와 사회주의 정책의 잔재가 강한 경제 간의 차이로 이해된다.

본인이 노르웨이 근무시절, 한국의 국정자문위원들의 노르웨이 방문이 있었다. 당시 국정자문위원을 맞아 노르웨이 보수당 당수가 대담하였으며 그 내용이 잊혀지지 않아 잠시 소개한다.

노르웨이 측 : “금번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국 측 : “한국도 상당히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국민 복지를 검토할 단계에 와서 우선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노르웨이를 공부하고 싶어 왔다.”

노르웨이 측 :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 국 측 : “\$5,000을 넘어섰다.”

노르웨이 측 :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복지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우선 영국과 독일을 예로 설명하고 싶다. 2차대전 후 영국은 전승국으로 복지정책에서 출발했지만 지금 영국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 반면 패전국 독일은 경제 건설로 시작했지만 경제 발달에 맞춰 복지제도를 도입해 독일의 복지가 지금은 영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복지는 도입은 쉽지만 조정은 어렵다. 한국이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영국은 철의 여인 Thatcher 수상이 노동조합을 개혁하고 전반적인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영국 경제를 완전히 재생시켰다. IMF 구조조정을 받던 영국 경제는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 반면 독일은 강한 복지정책과 노동자 보호정책을 견지하였으며, 지금은 오히려 독일이 “구라과의 병자”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국가가 경제에 간섭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을 포함한 모든 경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고 있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재정투융자를 예로 들어 보자. 전통적 사고에 의하면 정부가 자금을 풀어 실업자에게 공공사업 일터를 제공하고 실업자는 그로 인한 소득을 소비에 사용한다. 소비가 증가되면 공장이 가동되어 고용이 증가되고, 경제는 불황을 탈출한다. 그러나 세계화 경제에서 소비자가 재정투융자 소득을 반드시 국산품 소비에 쓴다는 보증이



없다. 중국제 공산품과 호주산 식량에 쓸 경우, 산업가동효과는 중국과 호주에서 일어나게 된다. 결국 세계화에서의 경제정책은 국가의 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정책의 틀에서 경제의 흐름을 유도하는 차원의 정책이 주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완전 자유체제에서 인위적 개입은 어렵다는 말이다. 실업대책의 대 전제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돌아가서 경제를 운영하고 경제가 회생하도록 소비와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경제가 회생해야 실업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실업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 실업문제가 구조적 성격이 있다면, 이에 대처할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에는 “왕도(王道)는 없다”라는 말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시간을 두고 공을 쌓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아일랜드의 예를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이 80년대 중반, 노르웨이에 근무할 당시 구라파인들의 흥밋거리 논쟁 중의 하나가 “아일랜드는 구라파 국가인가? 아니면 제3세계 국가인가?”하는 것이었고, 자주 구라파 신문에 잘 교육된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을 찾고 있으니 데려가 달라는 아일랜드 정부 광고가 게재되었었다. 그런데 지금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구라파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이제는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도 첨단 분야가 아니면 어렵다고 한다.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대부분의 실업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본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본인은 국내 행정에 어두워 정확한 한계를 모른다는 것을 우선 고백해 둔다).

1) 사업 및 투자환경 조성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우선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투자 유치, 국제 경제 정보 획득 등이 있다.

(1) 인력양성

경제 변화에 따라 과거 생산의 3요소, 즉 토지, 자본, 노동 중 점차 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적자원을 양성한 국가에는 투자가 집중되고 또한 외국에서 인적자원을 고가에 사간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그 중에도 최고급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2) 노동시장의 탄력성 회복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의 실업율이 사회복지정책국가의 실업율 보다 극히 낮은 이유는 우선 노동시장의 탄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높은 탄력성은 기업의 환경 적응율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생존력이 강해질 뿐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 환경도 개선된다. 기업이 생존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새로운 직장의 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임이 절대가치로 하락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하락된다 해도 우선은 직업 창출이 중요하다.

(3)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면에서는 충청남도를 위시한 한국의 전반적 여건이 극히 좋으므로 언급이 불필요하다.

(4) 투자유치

선진국의 정부는 대부분 투자유치에 상당한 업무 비중을 두고 있다(후진국들도 물론 투자유치에 혈안이다). 투자유치, 특히 첨단산업 유치는 실업구제·기술습득·인적자원훈련 등 그 효과가 지대하다. 외국정부들도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들도 이를 잘 연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해외사무소를 이러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 도의 투자유치 정책 자료 수집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

(5) 국제경제정보획득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이다. 특히 경제면에서 정보의 가치는 무한하다. 도정에서도 직접 국제정보 동향을 획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도에서 일하는 요원들이 국내 차원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항시 인식하고 업무에 임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된 세계 시장의 금융, 산업, 상품, 교역, 투자 등 정보는 한이 없으며 때로는 그 중요성이 치명적이기까지 하다(예: 미불화 가치 전망,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동향, 중국의 산업·투자 동향과 과잉 상품 동향 등). 이제 도정도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하며, 정보 창구는 해외사무소를 십분 활용해야 된다. 또한 국제 정보의 분석적 획득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 경제정보센터를 세워 국내·외 정보를 항시 정리,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함이 필요하다.

2) 서비스 산업의 개발

일본 경제의 침체와 실업의 원인의 하나로 일본 서비스 산업의 미발달을 지적하는 예가 많다. 일본은 제조업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늦어, 선진 사회로의 이행에서 상대적으로 실업율이 증가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는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에는 구습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멸시하는 풍조도 있다. 그러나 현대 선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취업 면에서 직업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젊은이들의 창업에서 취업까지, 각종 서비스 산업의 개발은 향후 취업 전선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적극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다. 외국에서는 MBA 과정에 창업 분야가 있으며, 거기에서 서비스 분야 창업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충청남도도 대학의 MBA 과정에 창업과를 설치하여 향후 서비스·벤처 분야 창업에 도전할 젊은 엘리트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